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적 조명

2007. 4. 2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김우남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적 조명

2007. 4. 2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김우남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 IX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적 조명

14:30 등 록

15:00 개회식

개회사 : 김 우 남 (국회의원)

축 사 : 김 전 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장)

이 종 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5:30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 IX

좌 장 : 김 우 남 (국회의원)

발 제 : 박 찬 식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해녀 투쟁의 역사적 기억”

토 론 : 고 창 훈 (제주대학교 교수/세계섬학회장)

김 춘 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오 옥 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유 철 인 (제주대학교 교수)

좌 혜 경 (해녀박물관 연구팀장)

한 재 순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장)

17:00 종합토론

김 우 남 (국회의원)

제주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정책포럼인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이 어느덧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의 주제는 제주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적 조명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수산정책에까지 접목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학전문가, 세계 섬 연구 행정학전문가, 대학에서 에코페미니즘을 강의하고 계시는 전문가, 현실 지방자치가, 해녀문화의 전승보존 연구가, 수협유통 실무책임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접근을 종합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해녀의 과거와 현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대하여 진솔한 지혜를 맞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산분야도 개방화와 한·미 FTA 등으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요즈음입니다. 대내외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우리 어민과 해녀들의 생활·복지 등 전 분야에 파급되어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 중 하나가 제주 해녀처럼 가장 지방적인 것은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도 수산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건설적 논의 결과가 입법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개발 세미나를 위해 준비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발제자를 포함한 토론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빛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전 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장)

제주해녀의 정신을 후세에 계승하고 제주 해녀문화를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해녀항일의 역사적 현장에 건립된 해녀박물관에서 김우남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수협중앙회 이종구회장님, 해양수산부 김춘선어업자원국장님, 해녀연구에 온 열정을 다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세계 섬학회 회장이신 고창훈교수님, 유철인교수님, 박찬식 교수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의 원님, 좌혜경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해녀들은 1932년 일제의 수탈에 맞서 항일운동을 일으키는 등 강인한 제주 여성의 자존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어려운 작업환경을 딛고, 제주경제의 주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해 온 제주해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5년경만 하더라도 1만 5,000여명에 이르렀던 제주해녀가 현재는 5,600여명으로 줄었고, 고령화로 60, 70대가 대부분이어서, 멀지 않아 해녀들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해녀의 항일운동”의 정신을 되살리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녀들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함은 아주 뜻 깊은 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해녀 생업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 구 (수협중앙회장)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참 뜻을 새기고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오늘 포럼을 주최해주신 존경하는 김우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회를 이끌며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전근 사업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역사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법정사 항일투쟁, 조천 만세운동과 더불어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일제가 추운 겨울 바다에서 힘겹게 생산한 해산물을 싼 가격에 착취하는 것에 분노한 제주 지역 해녀들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 총궐기하여 항일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어머니이자 어업인이 맨손으로 일제의 총칼에 분연히 맞서 싸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

제주도 해녀 어업인들이 일제가 자행한 혹독한 만행에 맞서 치열하게 전개한 항일운동의 체계적인 기록 보전과 그 운동의 역사적 조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녀 항일운동과 관련해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정립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적 조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전 그대로의 온전한 어업 형태와 생활 모습을 갖춘 제주도의 해녀 어업인들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선 해녀 어업인들이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하여 해녀 어업이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인정받아 다양한 보호와 진흥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박찬식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토론회 좌장이신 김우남 의원님을 비롯해 토론 참석자 여러분께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여러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해녀 어업인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복지가 더욱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김우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발 제

제주 해녀 투쟁의 역사적 기억

박 찬 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제주 해녀 투쟁의 역사적 기억*

- I. 머리말
- II. 신문기사로 보는 해녀투쟁의 기록
- III. 해녀투쟁 참여자의 기억
- IV. 기억의 전승
- V. 맺음말

I. 머리말

1931~1932년 ‘제주해녀투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7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주민의 뇌리에 뚜렷이 각인되어 왔다. 이 사건은 해방 후 3·1사건과 4·3항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저항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대중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는 4·3의 피해의식과 반공의 이념이 지배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향토사가들은 해녀투쟁에 대해서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성격보다는 해녀들의 단순한 이권수호운동 정도로 평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일제하 대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실증적인 연구물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해녀투쟁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해녀투쟁은 국가로부터 항일독립운동의 공적 기억으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 이 글은 2006년 6월 7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제주해녀 :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제 해녀투쟁에 대해서는 차분히 그 역사적 기억의 변천 과정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²⁾ 해녀투쟁의 기억은 식민지시대 말기 억압적 상황을 거쳐 해방 직후 민족적 열기가 분출했던 시대와 43항쟁과 탄압의 국면, 군사정권 시대, 민주화운동기로 이어지면서 시대적 정치·사회 지형과 맞물려 변화하여 갔다.

이러한 기억의 변화를 예민하게 고찰하는 것은 현대사·사회사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기의 사실, 그것도 집단 투쟁과 같은 사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정치·사회적으로 현재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녀투쟁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역사학적 연구에는 충실했지만,³⁾ 현재적 시점과 주관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기억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검토는 시도되지 않았다. 최근 역사학에서 기록과 마찬가지로 기억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당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기자들의 기록 속에 반영된 해녀투쟁의 인식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사건 참여자 가운데 주동자였던 해녀 세 사람의 생존 때 구술 내용을 토대로 기록과 기억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향토사학자를 비롯한 지식인의 기억 변화, 공식 기록(역사)의 변천 등에 주목하여 기억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앞으로 해녀투쟁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적 의미를 조화·발전시킬 수 있는 지향 지점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기억의 되새김과 드러냄을 통한 미래 기념의 방향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알박스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과거 사건의 기억을 '자전적 기억'으로, 문서나 사진 등의 기록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들을 통해 전달되는 기억을 '역사적 기억'이라고 분류하였다. 그는 '역사'를 '변화의 기록'이라고 하여 '역사적 기억'을 '집합기억'과 구분하여 이해하였다(김영범, 1999). 이 글에서 필자는 '역사적 기억'을 알박스의 '기록과 관련된 기억'이라는 의미 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기억'으로도 정의해 두고자 한다. 즉 사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기억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역사적 기억'이란 개념을 쓰고자 한다.

3) 제주해녀투쟁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로는 藤永 壯와 박찬식의 다음 글이 주로 참고 된다. 藤永 壯, 「一九三二年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 『朝鮮民族運動史研究』6, 1989 ; 朴贊殖, 「濟州 海女の 抗日運動」,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濟州海女抗日鬪爭紀念事業推進委員會, 1995.

II. 신문기사로 보는 해녀투쟁의 기록

일제하 제주해녀투쟁은 사회적으로 조선시대 말기까지 賤役이라고 천시되던 해녀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는 점에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해녀투쟁의 성격을 거론할 때에는 종래 생존권을 위한 순수경제투쟁과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운동으로 보는 인식이 양립하여 왔다. 이는 사건을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당시 기록 가운데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을 전해주는 신문 기사를 둘러싸고도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메워줄 단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우선 당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서술한 뒤 기사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입장에서 해녀투쟁 사건을 인식·묘사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⁴⁾

1930년대로 접어들어 해녀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해녀조합은 철저히 어용화되어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다. 1930년 성산포에서는 해초 부정판매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러 갔던 현재성 등 4명을 검거하고 29일의 구류에 처했다. 해녀들과 지역 청년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성산포와 구좌면 일대에 널리 배포하였다. 경찰은 격문 작성의 책임자로서 구좌면 하도리 청년 오문규·부승림 두 사람을 검거하고 벌금형을 언도했다.⁵⁾

성산포 사건을 통해 해녀들은 관제 해녀조합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여 단결하여 갔다. 해녀회는 성산포와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하도리 해녀들이 조합을 상대로 투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⁶⁾

1931년 하도리 해녀들이 캐낸 감태와 전복의 가격을 조합측에서 강제로 싸게 매기려 하자, 해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거센 항의에 부딪힌 조합측은 정상적인 매입을 약속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결국 하도리 해녀들은 조합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여 1931년 6월부터 직접 투쟁에

4) 위 藤永 壯와 박찬식의 글에서 당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해녀투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서술하여 놓았다.

5) 『조선일보』, 1930년 9월 11일 ; 11월 1일 ; 12월 11일. 박찬식, 앞의 글, 82~83쪽에 이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 놓았다.

6) 玄尙好, 『一九三一年 濟州島 海女鬪爭의 史實』, 1950(프린트본).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하도리 해녀들은 이웃 마을인 종달·연평·세화리 해녀들에게 진상을 호소하고 면민들에게 조합의 정체를 알리고 규탄하는 활동을 개시하였다.

활동적인 해녀들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우리들의 생활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해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따라 각종 집회가 열리고, 농민회·해녀회 등의 모임에서는 각종 관제조합을 처부수자는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결국 1931년 12월 20일 하도리 해녀들은 회의를 열어 해녀조합에 대한 요구 조건과 투쟁 방침을 확정하고,⁷⁾ 즉각 해녀조합 사무소가 있는 제주읍으로 향했다. 경찰의 제지를 염려하여 발동기선을 타고 제주읍으로 출발했으나, 폭풍으로 배가 나아가지 못해 이 투쟁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본격적인 해녀 투쟁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었다.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3백여 명은 세화리 장날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따리를 매고 하도리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부근 마을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합세, 집회를 열어 해녀조합에 대한 성토를 하고 제주읍을 향해 행진하여 나아갔다. 시위 행렬이 평대리 구좌면사무소에 다다르자, 면장이 나서서 요구 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오후 5시에 일단 해산하였다.⁸⁾

7) 玄尙好, 위의 책. 당시 요구 조건과 투쟁 방침은 아래와 같다.

* 요구 조건

- ① 모든 어획물은 현품 판매로 하되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입찰 경매할 것
- ② 생복 지정상인 고평호를 즉시 처벌하고 건복은 즉시 조합의 책임에서 판매할 것
- ③ 1931년도 하도리산 생복가액 전액을 1930년도 생산액에 준하여 보상할 것
- ④ 감태 재평가 판매를 즉시 실시할 것
- ⑤ 약질 상인과 결탁한 조합 서기 이유생을 즉시 파면하고 처벌할 것
- ⑥ 조합원을 기만하는 관제조합 반대

* 투쟁 방침

- ① 조합원은 조합사무소로 데모를 단행하여 이를 점거하고 요구 조건 전부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 투쟁할 것
- ② 이 투쟁에 참가하는 전 해녀들은 십일 간 양식(주로 떡)을 가지고 갈 것
- ③ 건복을 가지고 가서 즉석에서 판매하라고 할 것. 만약 조합에서 판매치 못할 경우에는 금후의 해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간섭치 않는다는 각서를 받을 것
- ④ 해산물 자유 판매를 절대로 주장할 것
- ⑤ 각 면에 연락하여 투쟁을 전도적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할 것
- ⑥ 대표들은 개인행동을 취하지 말고 질서 있고 요령 있는 태도로써 담판하여 적이 축출하려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 사무소라고 주장 거부하며 구속자가 생길지라도 비겁치 말고 최후까지 싸울 것
- ⑦ 지리에 능숙한 자를 미리 조합사무소 주위에 잠복시켰다가 대표자 안내와 내외간 연락을 담당할 것

8) 『조선일보』, 1932년 1월 14일. 당시 요구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감태재에 대한 것

- ① 판매 문제는 지금부터 2주내로 해결할 것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해녀조합에서는 채취물에 대한 지정판매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조합의 지정판매에 불만을 품어오던 구좌·성산의 해녀들은 각 마을별로 회의를 여는 등 해녀조합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마침 지정판매일인 1월 12일은 제주도사 겸 제주도해녀어업조합장인 다구치[田口禎熹]가 새로 부임한 뒤 순시하러 구좌면을 통과할 날이고 세화리 장날이었다. 따라서 구좌면 하도·세화·종달·연평리, 정의면(현 성산읍) 오조·시흥리 등의 해녀들은 시위를 벌이기로 결행하고, 이 기회에 도사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2일 장날이 되자 세화경찰관 주재소 동쪽 네거리에 종달·오조리 해녀 3백여 명과 하도리 해녀 3백여 명, 세화리 해녀 4십여 명이 일시에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면서 만세를 외치며 세화장으로 향하였다. 시위대는 세화장에 모여든 군중들과 더불어 집회를 열고, 각 마을 해녀 대표들이 항쟁의 의지를 다지는 연설을 차례로 하였다. 이때 마침 제주도를 태운 자동차가 시위대 뒤로 달려오다가 놀라서 도사 일행은 구좌면 순시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시위대는 집회를 중단하고 차로 몰려가서 도사를 에워쌌다. 해녀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써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사태가 험악하여지자 도사는 해녀들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녀측에서는 ‘지정판매 반대’, ‘해녀조합비 면제’, ‘도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일본 상인 배척’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직접 도사와 담판을 벌였다. 결국 도사는 해녀

-
- ② 가격 등급은 지정한대로 할 것
 - ③ 계약금은 생산자에게 보관케 할 것
 - ④ 이종 약덕상인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 ⑤ 계약 무시고 상인 옹호한 升田 서기 즉시 면직
 - ⑥ 등급을 마음대로 구별한 무능 서기 반대
 - ⑦ 물품 인도 불이행
 - * 생복에 대한 것
 - ① 금후 2주일내로 완전 해결할 것
 - ② 지정 매수인 고태영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
 - ③ 계약금을 즉시 내어 줄 것
 - ④ 약덕상인 고태영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 ⑤ 일체의 지정 판매 절대 반대
 - ⑥ 일체의 계약보증금 생산자 보관
 - * 조합에 관한 것
 - ① 미성년, 40세 이상자에게 조합비 부과 반대
 - ② 병, 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 ③ 위선적 우량조합원 표명 철폐
 - ④ 總代 里別 公選
 - ⑤ 조합재정 공개

들의 시위에 굴복하여 요구 조건을 5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⁹⁾

그러나 도사가 돌아간 이후 일제는 무장경관대를 출동시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34명의 해녀 주동자들과 수십 명의 청년들을 체포하여 버렸다. 심지어 전남 경찰부에서 응원 경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각 마을 해녀들은 심하게 반발하였고, 26일에는 우도 해녀들이 주동자를 검거하러 온 배를 에워싸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27일 종달리 해녀들이 검거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 해산됨으로써 해녀들의 저항은 진정되었다.¹⁰⁾

이상과 같이 당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해녀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직접 항일이나 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녀들의 움직임은 해녀조합의 해산물 저가 매수와 각종 횡포에 대해 권리와 생존을 위해 투쟁한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사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할 때 이 부분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당시 제주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이 있었는데, 주재 기자들 대부분은 1920년대 이후 대두한 청년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었다. 1928년 제주도내 조선공산당 당원이던 한상호·김정로·윤석원 등은 동아일보 제주지국의 기자였다.¹¹⁾ 1931년 7월 13일 있었던 제주청년동맹원들의 노동현장 지원 사건을 주동한 장종식과 신현덕은 각각 조선일보 제주지국장, 동아일보 제주지국장이었다. 제주청년동맹원 이태윤과 홍순일·김태륜 또한 조선일보 기자였다.¹²⁾

그리고 해녀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한 혁우동맹원 신재홍·문도배·오문규·강관순 등은 모두 판결문에 기자가 직업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1931년 9월에 조선일보 성산포분국에서 회합을 가진 것으로 보아,¹³⁾ 조선일보 기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해녀투쟁의 전말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화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제주도 세포조직의 전단계인 혁우동맹을 조직하여 해녀들의 경제적

9) 『조선일보』, 1932년 1월 15일 ; 1월 24일.

10) 『조선일보』, 1932년 1월 26일 ; 1월 27일 ; 1월 28일 ; 1월 29일.

11) 『동아일보』, 1928년 9월 12일, <社告>.

12) 박찬식, 「사회운동」, 『제주도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221~222쪽.

13)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33. 6. 5).

불만을 포착하였다. 이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혁우동맹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촌 대중과 해녀 획득에 활약하여 공산주의 기본 대중의 토대를 건설하던 바 구좌면 해녀 ‘데모’를 총지휘하여 조선 초유의 큰 항쟁을 발생시켰다 한다.”라고 하여,¹⁴⁾ 해녀투쟁과 혁우동맹과의 연관성, 항쟁의 특성 및 규모 등을 지적하였다.

해녀투쟁을 기사로 작성한 혁우동맹원들은 이 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했지만, 비밀 결사조직과 해녀 대중의 보호를 위해 사건과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숨긴 채 자연발생적인 경제 투쟁으로 기술하였다고 해석된다. 당시 일제의 탄압 상황을 이해한다면, 독립을 내세운 표면적 민족운동은 곧바로 검거와 조직의 해체, 해녀대중과의 괴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문기사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대한 이러한 표리부동의 이중적 인식이 후대의 역사적 기억의 전승과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 『조선일보』, 1933년 2월 8일.

III. 해녀투쟁 참여자의 기억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신문에 보도된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민족운동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들이 의식적으로 해녀들에게 민족의식을 이입시킨 결과, 해녀들이 몸소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나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해녀들의 투쟁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닌 항일운동으로 자각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부춘화·김옥련·고순효 등 해녀투쟁의 주동자들의 기억 속에는 항일운동으로 뚜렷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세 사람은 당시 1932년 1월 하도·종달·세화·우도·시흥·오조리 지역 해녀 1천여 명이 참가한 투쟁을 주도했던 여성이다. 모든 해녀투쟁 참여자를 대표하여 일본인 제주도사와 협상을 직접 했고, 부춘화·김옥련은 경찰에 체포되어 미결수로 6개월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러므로 해녀투쟁 참여자들의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의 편린을 이들이 남긴 기억의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부춘화는 1908년 구좌면 하도리에서 부원돈의 장녀로 출생하여 1922년 당시 15세 때부터 해녀 생활을 했으며, 1923년 구좌면 하도리 보통학교 야학부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근대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는 21살이던 1928년 제주도해녀조합 산하 조직인 구좌면 해녀조합 대표로 선임되어 해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옥련은 1909년 구좌면 하도리 서문동에서 1남 4녀의 막내딸로 태어나 9살 때부터 물질에 나섰다. 잠수 실력이 좋아서 비슷한 또래 해녀들 가운데 1, 2등을 다투었다.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학을 다니면서 신학문을 깨우쳤다.

제주섬 동쪽의 토지는 척박하여 여성이라면 모두가 물질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다. 먹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던 물질노동의 가치에 대해 두 해녀는 야학을 통해 새로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도보통학교 야학강습소 1회 졸업생으로서, 오문규·문무현·부대현·김태륜 등 청년 지식인 교사들에게 근대적인 민족 교육을 받았다. 『농민독본』, 『노동독본』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한문뿐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받았다.

부춘화는 해녀투쟁을 자신이 주동한 것으로 기억했으며 항일투쟁으로 정확

히 인식했다. “(나는) 1928년 제주도해녀조합 산하의 조직인 구좌면 해녀조합 대표로 선임되어 해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1931년 5월 일본 식민지 정책하에서 제주도 해녀조합의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해녀들이 어렵게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인 주재원으로 하여금 일괄 수납시켜 부당하게 착취 행위를 하는 실정을 목격하고, 일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침탈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시정되는 일이 없었다. 이에 구좌면 해녀회원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직접 진정서(9개 항의 요구사항)를 작성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했다.¹⁵⁾

그는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없음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얘기만 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별별 수단을 다 썼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녀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략) 그 사건으로 인해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배후 조종 인물을 찾는다고 검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구술하였다.¹⁶⁾ 그의 기억에서 혁우동맹이나 지역 청년과의 연계·지도 같은 내용은 감춰져 있다. 사회운동가들은 단순히 배후 조종자로 기억되었다.

부춘화의 기억은 1985년 당시 군사정권체제의 정치·사회적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43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가 해녀투쟁의 기억에 중첩되어 있다. 즉, “그 후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43사건을 겪고 토벌대가 가고 난 후 또 한 차례의 수난이 있었다. 그때 각 마을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끝내 거부했다. 뭘 잘못했는지 얘길 해주면 반성문을 쓰마고 하자 대뜸 해녀사건을 들춰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호통을 쳤다. (중략) 해녀 사건은 약 50년쯤 전인 내가 스물네 살 나던 해 초봄의 일인데 일생 나를 쫓아 다닌 셈이다.”라고 하여 4·3 당시 해녀투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개인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옥련은 해녀투쟁에 대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일본한테 압박받고 해녀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그뿐이야.”라고 기억한다. 특히 해녀투쟁의 몇 가지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해녀’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으로서 ‘해녀조합’이 조직되었는데, 여성도 ‘직업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시초가 된 점이다. 둘째, 제주도 최초의 여성 중심의 생존권 투쟁의

15)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16) 「삶의 순수한 투쟁 -주동자에게 듣는 '세화리 해녀사건'」, 『월간 관광제주』 1985년 3월호.

운동인 점이다. 셋째, 여성 중심의 조직적인 모임(부인회·부녀회)이 태동하였다는 점이다.”라고 그는 기억하였다.¹⁷⁾

특히 그는 야학강습소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기억하였다. “이러는 중에 내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즉, 마을에 야간학습소가 생기고 나는 저녁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치다시피 하여 야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2년간 계속된다. 나는 이 야학에 다님으로써 나의 ‘남편’과 만나게 되고 해녀사건을 주동하게 되는 ‘인연’과 맺어지게 된다. 이 야학소는 일본식민시기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의식 있는 젊은 남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계기가 된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노출되어 탄압받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독립을 위한 준비로서 전국적으로 교육이란 방법으로 계몽을 하였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해녀투쟁은 “제주도청년회의 핵심인 오문규·김순중에게 지도를 받은 부춘화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조직적 항일투쟁”이라고 하였다.

그는 해녀투쟁의 주역으로 나섰다가 일제에 검거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취조 과정에서 소 채찍을 맞고 두 팔을 뒤로 비틀리며 나무 봉 위에 무릎을 꿇린 채 짓눌리기를 수차례 당하였다. 감옥에서 그는 배식·세탁 등을 맡았다. “감옥에서도 조국 독립을 의논하고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하였다. 김옥련은 해녀투쟁 전에 일제의 눈을 피해 한글과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주던 야학 교사들과, 당시 해녀투쟁에 연루돼 함께 옥고를 치렀던 사회주의운동 계열 청년들도 기억했다. 그에게 해녀투쟁은 단순한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

해녀투쟁의 또 다른 주동자인 고순효는 부춘화·김옥련·부덕량 등과 하도강습소를 다녔고, 해녀투쟁 때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시위를 같이 이끌었다고 기억하였다.¹⁸⁾ 그는 “물건 값을 잘 쳐주지 않아서 파동이 일어났는데, 오문규·부승림 등이 주동을 하여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매일같이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였다. 오문규 선생과 김옥련·부춘화 등

17) 김옥련의 증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 「제주해녀항쟁의 주도자 김옥련 할머니의 삶」, 『43과 역사』 3, 2003.

18) 1996년 12월 1일, 서울시 공향동 고순효의 자택에서 채록.

과 내가 같이 의논하여 제주읍내의 해녀조합 사무실로 향의하러 간다고 바닷길로 갔으나, 파도가 세어서 결국 가지는 못하였다. 조합에 가서 물건 값을 따지는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위 계획을 세웠다. 해녀운동 외에도 항일활동에 관련된 회의를 청년들과 더불어 하였다. 해녀들은 우리 일행(부춘화 등)만 참여하였다. 오문규는 참석뿐만 아니라 거의 주동하였다. 오문선(오문규 동생)·부승림·김순중 등이 참여하고 회의와 활동을 이끌었다. 해녀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들이 다 뒤에서 지도하였다.”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청년지식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순효는 “나는 굴동에서 부춘화와 같이 살았다.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도보통학교) 오후반(하도강습소)을 다녔다. 꼬박 6년을 다녔다. 나이 차이가 있었으나 다들 같이 다녔다. 내가 가장 어렸다. 부춘화와 내가 7살 차이다. 공부한 과목은 일본어만 빼고는 주간과 같았다. 일본어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와 한글은 가르쳤다. 「노동독본」이라는 책도 본 적이 있다.”고 구술함으로써, 야학강습소의 중요성을 엿보게 한다. 즉, 해녀투쟁의 이면에 야학강습소를 통해서 해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교육된 민족계급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기억의 전승

해녀투쟁의 기억은 해방 직후 사회운동과 대중투쟁의 공간에서 되살아났다. 항일운동의 주역들이 해방 후 제주지역 정치·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13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¹⁹⁾ 해방 공간에서 발발한 3·1사건과 4·3무장봉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하 해녀투쟁에서 찾는 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다.

1950년 7월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을 기록한 현상호²⁰⁾는 글 첫머리에 「제주도 인민항쟁과 해녀투쟁」이란 장을 설정하여 “제주도 해녀투쟁에서 발휘한 투쟁력과 정신은 해방 후의 남조선 인민항쟁을 역사적으로 전변케 한 제주도 인민항쟁의 역사적 원천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지속되었던 제주도 해녀투쟁은 연 인원 1만7,000여 명의 참여와 대소 집회 및 시위 횟수 연 230여 회에 달하는 대규모의 운동이었다.²¹⁾ 이 사건은 제주도 해녀들이 해녀조합의 횡포에 저항하였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김덕호가 현상호의 글을 주로 참고하여 「1932년 제주도 해녀들의 반일투쟁」(1962)이란 글을 썼다. 김덕호가 1965년에 제주4·3사건에 관한 글을 발표한 것으로 보건대,²²⁾ 해녀투쟁을 4·3사건의 전사로서 조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7년 3·1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고창무²³⁾는 뒷날 기고한 글에서 3·1사건과 4·3항쟁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해녀투쟁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19) 해방 이후 제주지역 항일운동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2006.

20) 현상호는 하도리 출신으로 1932년 해녀투쟁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黍良]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33년 검거되어 1년 2개월 간 복역하였고, 오사카에서 주물공으로 일하면서 좌익활동을 하다가 1939년 또다시 검거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21) 이 숫자는 앞의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에 의거하였다. 연 인원에는 간부회를 포함한 일반 회의·항의대회·시위 등에 참여한 인원이 모두 합산되어 있다. 시위 참여 인원은 연 4,286명으로 조사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횟수는 회의·간부회나 항의대회 등을 전부 합친 숫자이다. 시위 횟수는 하도리 3회, 종달리 2회, 우도 2회, 세화리 2회 등 총 9회로 조사되어 있다.

22) 김덕호, 「제주도 인민들의 4·3봉기」, 『력사과학』, 1965.

23) 제주도 금융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제주도 민전 임원을 지냈다.

제주도민은 이조시대에는 先罰後啓의 특권을 장악한 목사의 전횡에, 일제시대에는 郡守와 警察署長과 檢事의 직권을 한 손에 잡고 갖은 횡포를 다하던 島司의 억압에 시달려 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체념과 생사의 판가름을 하여야 할 궁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猛進하는 성격, 이와 같은 도민의 이율배반의 심성은 方哥 난, 이재수란, 일제시대의 해녀사건 등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²⁴⁾

43사건이 진정된 뒤 항일 대중투쟁의 역사적인 선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일본에 거주하던 제주사람들에게 전승되었다. 1947년 3·1사건 당시 오현중 교사로 있다가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간 김봉현은 1960년 출간한 『제주도역사지』에서

제주도 인민들도 고무 추동되어 반일 반제 사상이 급격히 제고되었으며 또한 전위 조직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확립키 위하여 각종 어용조합 단체에 잠입하여 해체를 기도하고, 이어서는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 도민 전체를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궤기케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전략 전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일어난 것이 해녀투쟁이며 그러므로 이 운동에는 전 도민이 거의 참가하였고 일제 강점 후 제주도에서 보지 못한 적극적인 반일 반제 투쟁이었다. (중략) 투쟁의 범위에 있어서도 조천 한림 애월 대정 중문 서귀 성산면 등지의 전 농민 약 40%를 조직적으로 투쟁에 참가케 하고 또 그의 규모에 있어서도 총 동원 수(연 16,636인)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증시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 있어서 인민적인 투쟁 모습을 구비한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또 옳은 방향에서 조직하고 궤기케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제주도에서 활동하던 성실한 애국주의자들과 선진적인 노동자·농민·학생·청년들의 빛나는 애국 투쟁의 일부였다. 고 하여, 해녀투쟁을 전형적인 대중투쟁이며 항일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하였다.²⁵⁾

그러나 43을 거치며 반공국가가 수립된 이후 제주 현지에서는 해녀투쟁은 주로 해녀들이 직접 나선 순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으로 인식·평가되었고, 사회주의 조직 운동가들은 배후에서 선동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1952년 『탐라기년 속편』을 저술한 김석익의 다음 글이 참고 된다.

본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연변의 주민들은 다른 생산이 없고 오직 어채를 업으로 삼아 생활이 어려운 자는 생명을 무릅쓰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해초를 캐고

24) 『조선일보』 1960. 7. 16.

25) 金奉鉉, 『濟州島歷史誌』, 大阪, 1960, 343쪽.

전복을 따는 것으로 생을 도모하니, 옛사람이 전복을 먹지 않음은 이를 가련히 여긴 까닭이다. 요즘에 와서 비로소 관에서 해녀조합을 두어 세를 거두었다. 해녀라 함은 잠수녀를 일컫는다. 조합에는 조합장이사서기 등이 있어 잠수들이 채취한 것을 독점해 관장했고 매매와 시세의 높낮음이 오로지 조합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까닭에 원성이 높았고 인심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 해에 島司 田口禎憲가 세화리 주재소를 지날 때 근처의 잠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사람들마다 포창을 들고 길을 막고는 억울함을 호소함에 도사가 거짓 허락하여 그들을 해산시키고는 돌아온 즉시 잠수와 배후의 선동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래서도 부족하여 전남경찰대를 불러들여 철저히 수색·체포함에 전도가 喪氣하였다. 그 중 신재홍·문도배·김시곤·김순중 등 10여 명이 모두 선동죄로 징역에 처해졌고 그 외에도 매 맞은 후탈로 끝내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²⁶⁾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제주역사가 김석익의 인식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1960년대 말 김태능은 ‘해녀봉기사건’으로 명명하면서, 해녀조합의 지정관매로 조합원인 해녀들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에 분개하여 쫓겨난 것으로 보았다.²⁷⁾ 해녀들의 민족의식 수용 또는 사회주의 청년조직의 지도·개입 등은 서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도지』(1982)에는 ‘해녀의 생활권 항쟁’으로, 향토사학자 김봉옥은 『제주통사』(1987)에서 ‘잠녀의 생존권 항쟁’으로 규정하였다.

강대원(1970)은 이 시기 예외적으로 ‘항일투쟁’으로 적극 규정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봉기를 한 근본 원인은 일본인들의 지나친 인권 침해와 수탈행위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확한 성격 및 지향점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김창후도 ‘잠녀풀이’ 마당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화리 해녀 항일투쟁의 역사적 배경」(1983)이란 글을 쓰면서 ‘항일투쟁’이라고 규정하였지만, “해녀들이 파악하는 본 사건은 독립운동의 차원으로까지 승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존권 박탈에 대한 권리 옹호의 단순한 항일투쟁”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藤永 壯(1989)은 해녀투쟁을 1차 자료에 토대를 두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이 해녀투쟁이 어용화된 해녀어업조합의 부정에 반대하고 해녀들의 생활을 옹호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또

26) 金錫翼, 『心齋集』, 1990, 181~182쪽.

27) 김태능, 「탐라도역사」, 『제주연감』, 1969 ;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에 재수록.

한 이 운동에는 공산당 재건을 노리는 좌익청년들이 관련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 이 운동을 전위와 대중이 무리 없이 만날 수 있었던 지역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해녀들의 행동에는 제주도와 관계를 갖는 여러 가지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이 투영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본자료에 입각한 선구적인 실증 연구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실상을 소상히 알려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염인호(1990)는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 과정에서 전개된 해녀투쟁 사건을 주목하였다. 그는 해녀투쟁이 근본적으로 신분적인 천시와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온 해녀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저항운동으로 보면서도 이 운동을 조선공산당 제주야체이카가 지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녀투쟁의 주역을 제주지역 사회주의 운동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해녀투쟁을 주제로 삼은 소설 『바람타는 섬』(1989)에서 작가 현기영은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과 사회운동권의 항일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⁸⁾

1980년대 말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냉전체제가 해소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해녀투쟁에 대한 기억이 변화하였다. 그 결과 1993년 판 『제주도지』에서 김찬흡은 ‘제주해녀항일운동’로 공식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구좌읍 주민을 중심으로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8월 15일 광복절에 제1회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해녀투쟁에 대한 기억은 ‘항일’의 성격으로 일원화·공식화되었다.

이 위원회가 발간한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에서 박찬식(1995)은 해녀투쟁을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항일 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특히 해녀들의 민족의식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다. 1996년 해녀투쟁의 주역인 고순효로부터 입수한 하도야학강습소 1회 졸업생 사진은 해녀들이 지역 청년들로부터 야학을 통해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수용했음을 보여준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28)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5.



해녀투쟁 주역들이 다녔던 하도강습소 제1회 졸업기념 사진
 윗줄 왼쪽부터 홍문봉·부춘화·김봉혁·김옥련·송순옥·부덕량·고순
 효는 졸업생, 아랫줄 왼쪽부터 문무현·부대현·김남석·강○○·김
 태륜은 교사, 가운데줄에 있는 청년은 부춘화의 오빠 부승림으
 로 졸업생은 아님.

사진에서 보이는 김옥련·부춘화·부덕량·고순효 등 해녀투쟁의 주역과 문무현·김태륜 등 교사는 해녀 대중과 사회운동권 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우선 이 싸움을 이끈 부춘화·김옥련·부덕량 등은 모두 하도강습소(하도보통학교 야간부) 제1회 졸업생으로서, 문무현·부대현·김태륜 등 청년 지식인 교사들에게 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해녀들은 청년 교사들로부터 『농민독본』·『노동독본』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한문뿐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받았다고 한다. 둘째, 이 운동의 저변에는 ‘혁우동맹’, ‘조선공산당 재건제주야체이카’와 같은 청년 민족운동가들의 활동 조직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운동을 단순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세력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다.

1996년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는 일제하 제주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을 민족적 항일운동으로 평가하는 지침 역할을 하였다. 이 책에서 해녀연구가 김영돈은 「해녀항일운동」 부분을 집필하면서 항일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또한 1997년 조천 지역에 제주항일기념관이 건립되어 해녀항일운동을 제주도 3대 항일운동 중 하나로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제 자연스레 제주도에서는 해녀투쟁은 항일운동으로서 공인된 것이다.

이제 해녀투쟁을 항일운동으로 기억하게끔 하는 학계와 지방정부의 일련의 성과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해녀투쟁기념사업회에서는 2001년

3월 해녀투쟁 관련자 11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신청을 정부에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해녀투쟁이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했다는 점과 해녀투쟁 관련자들의 해방 후 행적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을 유보하였다.²⁹⁾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이념을 방편으로 한 것이었지 실제로는 조국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항일운동의 범주를 문화운동·사회운동으로 외연을 확대하게 되었고, 해녀투쟁은 주재소 습격, 폭력시위의 전개 등 3·1운동 못지않은 항일투쟁의 양상을 띤 사회운동으로 정부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03년 8월 15일 정부는 해녀투쟁의 전면에 나선 부춘화·김옥련 등 2명의 해녀와 혁우동맹원 문도배·한원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비로소 이 투쟁에 대해 항일독립운동으로서 공식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2005년 3월 1일에는 제주야체이카의 총책임자였던 강창보와 혁우동맹원 강관순·김성오·김순종이 선정되었다. 2005년 8월 15일에는 해녀투쟁의 주역 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덕량과 혁우동맹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신재홍과 혁우동맹원 채재오 등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해녀투쟁은 국가에서 공인된 항일독립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역사적 기억이 반공체제하에서 억압을 받다가 민주화시대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29)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 8월 7일자로 ① 사회주의 활동의 평가 문제 ② 독립운동 내용 불명확 ③ 활동 이후 행적 미상 ④ 광복 후 좌익 활동 ⑤ 독립운동 불분명의 사유를 들어 전원 탈락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왔다.

V. 맺음말

일제하 제주에서 일어난 해녀투쟁은 당시 신문기사 기록과 체험자들의 기억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민족해방을 위한 사회운동에 투신했던 기자들이 쓴 해녀투쟁 기록은 일제의 탄압 아래 운동조직과 해녀 대중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자 출신 청년운동가들이 해녀투쟁을 배후에서 지휘한 혐의로 검거되고 징역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해녀투쟁을 주도했던 세 사람의 주동자 해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들의 지도를 받은 것이었고, 적극적인 항일의 의지를 가진 투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기억은 일제말기 탄압의 국면에서 잠재해 있다가 해방 직후사회주의 항일운동가의 현실 정치·사회 활동 재개에 따라 자랑스러운 과거사로 되살아났다. 4·3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적 항쟁의 모범적인 역사로 제주의 지식인들은 기억하였다.

그러나 4·3 때 집단학살과 탄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반공국가 체제하에서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연결된 운동으로 불순한 움직임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투쟁 주체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전의 민족의 독립을 위했다는 자신에 찬 싸움의 기억은 다시 숨어들었다. 향토사학자들은 생존권·생활권·이권 수호를 위한 해녀들의 움직임 정도로 기록함으로써 해녀투쟁의 기억을 위축시켜 놓았다.

해녀투쟁의 기억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자유화·민주화의 결과였다. 1996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는 해녀투쟁을 비롯한 일제하 대중적 항일운동의 재평가를 수용하는 공적인 기억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이후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의 편찬, 해녀항일투쟁기념탑의 건립, 기념공원의 조성, 해녀박물관의 건립 등 공식적인 기억으로 전승되어 갔다. 이는 역사적 기억을 억압한 권위주의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제 해녀투쟁은 정치·사회적 지평 위에서 기억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고려되는 기억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특수한 해녀와 한국적 보편성인 민족운동을 결합하여 더욱 보편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 민족운동사의 기억으로 엄연히 자리잡은 데서 더욱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 지점에서 보편성을 갖는 기억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해녀 및 해녀투쟁의 특수성·미시사에서 실마리를 찾는 게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귀숙(1996)과 김은석(1999)의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권귀숙은 제주 해녀 연구의 우선적인 과제로서 새로운 여성성의 신화(강인한 여성, 박제화된 인식)를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여성성의 신화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체'하는 작업(탈신화화 작업)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향후 해녀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사(민중생활사), 미시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가사노동·경제권·의례·교육·공공부문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지적은 해녀투쟁의 연구·기념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김은석은 미시적 차원에서 해녀투쟁을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사회라는 보편적 구조 안에서 특정 지역 주민의 삶의 경험을 연구하는 국가사적 차원의 연구를 벗어나 해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노동의 일상을 경험하는 살아 있는 실제의 인간을 탐구하는 향토사적 접근을 요구하였다. 즉, 당시 나잠어업 노동의 영역에 나타나는 해녀들의 욕구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것이며, 억압된 노동의 일상에서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변 동료의 존재에서 집단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확보하려는 정서적 혹은 감성적 욕구는 가장 본질적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제시했다.

향후 해녀투쟁의 기억과 기념의 도상에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제 해녀투쟁의 역사적 사실 찾기에서 의미 찾기로, 거시적 해석에서 미시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해녀항일투쟁기념탑이 올라섰고 해녀박물관이 개관된 이 시점에서 미래의 기억과 기념을 위한 새로운 작업에 나설 때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해녀투쟁에 대한 기억을 항일운동과 경제투쟁의 양 시각에서 접근한 나머지 다양한 다른 기억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마찬가지로 신문기사 기록, 주동자의 증언, 향토사가의 서술, 제도화된 공식 역사에만 주목하다보니 다양한 계층의 제주민과 제주해녀들이 해녀투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기억의 전승뿐만 아니라 기억의 단절, 부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하였다. 좀 더 밀도 있고 체계적이며 미시적인 접근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朝鮮日報(1932)

東亞日報(1932)

民衆時報(1935~1936)

玄尙好, 「濟州島 海女鬪爭의 史實」, 1950.(東京, 프린트판)

玄尙好, 「日本帝國主義に反對した濟州島の海女鬪爭について(1)」, 『朝鮮月報』 第10號, 朝鮮研究所, 1957.

金奉鉉, 『濟州島歷史誌』, 大阪, 1960.

김덕호, 「1932년 제주도 해녀들의 반일투쟁」, 『력사과학』 1962년 4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김태능, 「탐라도약사」, 『제주연감』, 1969(『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재수록).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문금숙 정리, 「삶의 순수한 투쟁 -주동자에게 듣는 ‘세화리 해녀사건」, 『월간 관광 제주』 1985년 3월호.

金榮·梁澄子, 『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 新宿書房, 1988.

藤永 壯, 「1932年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 『朝鮮民族運動史研究』 6, 1989.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1990.

金榮墩, 「海女」, 『濟州의 民俗』 II, 濟州道, 1994.

朴贊殖, 「濟州海女の抗日運動」,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濟州海女抗日鬪爭紀念事業推進委員會, 1995.

朴贊殖, 「社會運動」, 『濟州道抗日獨立運動史』, 濟州道, 1996

金榮墩, 「해녀 항일투쟁」, 『濟州의 海女』, 濟州道, 1996.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1996.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1996.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집 3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은석,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제주도연구』 16, 1999.
-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 허호준 정리, 「제주해녀항쟁의 주도자 김옥련 할머니의 삶」, 『4·3과 역사』 3, 2003.
-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5.
-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 연구』 132, 2006.

토론요지

제주해녀의 UNESCO 문화유산 등재와 세계화를 위한 로드맵 (2008-2017)

고 창 훈 (제주대학교 교수)

1. 제주해녀를 문화제주와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힘으로 키우려면 제주해녀 직업에 대한 자긍심부터 살려주어야 한다.

이미 제주해녀의 생업기술과 그 삶의 가치 전반을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유될 정도로 나름의 준비는 되어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양성평등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근거로 키우려는 정책 목표도 세워졌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의 중심은 제주도가 제주해녀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이를 통한 제주해녀가치의 보존과 해녀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을 말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2004.4.19)와 뉴욕타임스(2005.2.15과 2006.7.17)가 제주의 해녀를 각각 섬 문명의 보물 (island possession)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양성평등의 선구자(pioneer modern Korean gender role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평가하면서도 제주도가 이대로 방치하면 해녀와 해녀의 희귀한 가치와 문화가 10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가 제주해녀의 가치와 문화를 보존하고 평화문화의 제주를 상징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실천을 년도별로 분야 별로 시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인류문화로서 독특한 해녀문화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1) 제주해녀는 양성평등문화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제주잠수회를 중심으로 해녀의 생활 민요 그리고 민속의식들이 섬문명의 독특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만큼 섬사회가 보여주는 양성평등의 문화의 독특한 형태를 정리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 2) 제주해녀가 102개의 잠수회가 민회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127개의 공동어장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인근해양의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잠수직업의 삶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전통적인 기구만으로 수행하는 해양 작업기술, 해양지역의 민회인 잠수회의 공동체적 마을자산과 환경관리등을 해양지역의 마을공동체의 삶과 문화와 연계시켜 설명하여 섬문명이 배출한 가치있는 대안이라는 점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 3) 제주해녀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여성사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남성위주의 유교문화의 극복, 1890년대 이후의 출가해녀의 개척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의 활동, 1932년의 해녀항쟁, 현대사회 속에서의 마을공동체 의식의 유지 등을 사회사적으로 규명을 통해 섬문명의 사회사적 측면에서 제주해녀의 삶과 그 양식이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전체사회에 기여한 문화적 기여도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한반도 해양지역과, 일본지역으로의 출가와 정착을 통해 섬문화가 동북아 지역의 문화와 접합해 나가는 과정이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의 모델이 현대사회에서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4) 최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하려는 맥락을 고려할 때 (김란기 문화적 경관의 전개 등 참고) 제주도 해녀와 잠수회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동어장, 불턱 및 해신당 등은 유형자산으로, 그리고 잠수회에 근거한 해녀의 불턱문화와 해녀노래 등과 정치경제사적 역사는 무형자산으로 하여 혼합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연관지워서 제주문화재 조례와 한국문화재 관련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경관에 대한 전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관련 조례 및 법률 보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전통적 수산업과 관련하는 자산으로, 후리질 그물, 해수 독, 굴 및 김의 양식 등의 기술등과 결합시켜 문화경관 지정하는 것이나 필리핀의 계단식 논 같은 것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5) 제주도가 상기의 1) 2) 3) 4)의 가치를 종합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동시에 국가문화재로 등재하여 해녀의 직업과 해녀문화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조치가 2007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과 국가 문화재로 지정의 절차를 거친후 2008년 UNESCO 한국위원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문화재의 지정시 잠수회의 추천을 받아 상군 해녀의 경우 문화재기능보유자로 지정하여 해녀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6) 제주도는 제주해녀의 직업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인류학적 가치를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정책과 해양수산물 문화예술과 등 합동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라산 정상일출봉 등을 가지고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 해녀단체 그리고 도의 합동으로 "제주해녀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및 보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등재 준비 및 해녀문화의 보전과 해녀직업의 전승 등의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한다.

3. 제주해녀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는 제주해녀의 세계적 가치를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있는 만큼 제주해녀의 육성이라는 틀 속에서 세계해녀문화공원 등의 대책이 세워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제주해녀 UNESCO 문화로의 등재는 제주해녀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공유하는 세계문화자산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등재, 지정, 지정 이후의 보전과 관리 후계자 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계해녀문화유산 제주해녀의 10개년 보전 육성 대책(2006-2015)" 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상호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면 한다.

- 1) 해녀박물관과 해녀 항쟁기념관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
- 2) 제주도내의 전면적인 재조사 및 연구와 국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지금 현재 불턱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은 우도와 구좌 정도이며, 40대 이하의 해녀가 있는 곳은 우도이다(4명). 따라서 해녀문화의 보전, 후계자

육성, 및 일반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도에 "세계해녀문화공원"이 세워져야하며, 그 틀 속에서 해녀 양성특수학교 (제주대 분교로 해도 좋음) 와 전통적인 해녀민속촌 등이 돌문화공원 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나가야한다.

- 4) 해녀 노래의 현대화와 제대로 된 영화나 대하드라마가 나와야 하며 이를 지원하여 한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통해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녀를 주제로 한 인어공주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가 더 나와야 한다.
- 5) 해녀양성학교는 후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과 관광객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해녀체험교실 운영이다. 또 다른 교육은 후계자 육성교육인데 잠수회가 희망자를 일년간 교육하여 해녀로 직업을 잇는 사람, 문화해설사, 해녀민속보유자, 해양환경 관리자, 해녀 체험교육사 등등의 직업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되 일은 원하는 잠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주대학교의 사이버 강좌에 제주해녀에 대한 첫 강좌가 2006년 봄학기에 개설되었다. 이를 근거로 대학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좌로 연계되어 실행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6) 상기 5가지의 내용을 마련해 나가면서 세계인과의 문화적 공유를 위한 세계해녀문화축제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을 우도 같은 마을단위가 주체가 되어서 하되 다른 민과 관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육성하는 것도 일본의 시라하마의 사례처럼 권장할만하다. 일본의 시라하마의 아마 마쓰리의 경우 43회에 이루면서 마을단위의 축제이지만 가장 특색있는 일본의 지역축제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해녀의 삶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7)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면 제주동북부는 제주 해녀문화의 벨트가 형성된다. 성읍민속촌의 산촌문화라면 우도의 해녀문화는 해촌 문화를 대표하는 만큼 이를 연계시키면 문화제주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녀가 제주도의 곳곳에 있는 만큼 사계 법환 보목 은평 한림 남원 등등의 마을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방향을 잡아 나가면 서로 해녀문화의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8) 해녀문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제주도의 브랜드가 되어 있다. 특히 우도 등의 지역의 경우 제주해녀가 원형대로 보존되는 마을로 대표성을 갖고 있다. 해녀문화를 잘 보존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다면, 이를 계기로 제주의 신화나 탐라문화의 육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 9) 해녀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하면서 세계인과 문화유산으로 공유하려면 행정은 이를 제대로 보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민간합동의 전담기구 등이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잠수회의가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를 잠수회 또는 해녀계로 하여 독자성을 갖게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 여성정책과에 해녀계를 두어 양성평등의 해녀의 문화 권익 등을 전담시켜야 하며 해양수산과의 어촌관리 업무와 상호 연계시켜 관리해 나가야 한다.

표 들어감

나잠어업의 의미와 노동 강도의 심화

유 철 인(제주대학교 · 인류학)

1) 나잠어업(裸潛漁業)의 의미

해녀의 몸은 반복적인 물질작업의 결과로 언제 물위로 떠올라야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 해녀들이 무호흡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나잠어업(물질작업)은 첫째, 신체의 자기통제 능력과 물건을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 사이를 잘 조정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둘째, 물질은 바다밭에 대한 지식과 몸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기술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머리싸움”이다. 셋째, 물질은 자기 능력껏 버는 것이기에 핵심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랜 경험으로 스스로 알아서 “눈치껏 배우는 것”이다. 결국 물질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은 경험을 통해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해녀들의 물질작업(나잠어업)은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인 현대까지 수렵채집 경제의 생산방식인 채집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채집이 아니라 바다밭을 가꾸면서 채취하는 바다의 농민(peasant)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농민이란 트랙터가 없는 경작자를 말하며, 잠수어업에서 트랙터는 산소공급 장치라 할 수 있다.

해녀는 바다의 농민이므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현대인의 오만함은 <전통적인> 기술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버리려고 한다. <몸 기술>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 기술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도 있다는 교훈을 알 필요성이 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기술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신체 자체인 것이다. 해녀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러한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

2) 노동강도의 심화

일본과 제주도에서 해녀복은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광목으로 만들었던 물옷에서 다이버들이 입는 고무옷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 재일동포가 제주의 친지에게 한두 벌 보낸 것이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게 된 시초이다. 이 옷이 처음 들어오자 해녀사회에 문제가 생겼다. 고무옷을 착용한 해녀의 작업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을에 따라서는 잠수회(해녀회)가 회의를 하여 개량 해녀복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개량 해녀복은 급속도로 보급되어, 어촌계 별로 공동주문을 하기도 했다.

고무옷을 입어 해녀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게 되자, 작업시간이 엄청 늘어나 소득은 높아졌지만, 잠수병이라는 직업병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제주해녀들은 물옷을 입었을 때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작업하던 것이 이제는 3시간에서 5시간을 훌쩍 넘어, 여름에는 점심도 거른 채 7~8시간 물질을 한다. 고무 잠수복의 보급이 4분의 1 쯤에 불과했던 1973년 우도에서는 겨울과 여름철 작업일수에 기복이 심했다.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월 평균 5일 작업을 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에는 월 평균 15일 작업을 하여, 1년간 월 평균 작업일수는 10일이었다.¹⁾ 고무옷 잠수복이 전 해녀에게 보급된 1985년에는 1년 내내 월 평균 15일 이상 작업을 하였다.²⁾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비례하여 해녀의 건강은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고무옷을 입으면, 몸을 신축성 있게 조여 주어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녀들은 말한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바로 물질을 때는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 해녀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물질을 시작하는가 하면, 점심을 건너 뛰기가 예사이다. 따라서 예전에 두통을 앓는 정도에 머물렀던 잠수병이 이제는 위장장애와 혈압상승 등 잠수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채취기간 중에 정기적인 휴무일을 정한다든지, 하루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을 정한다든지, 나아가서 채취날짜까지 정한다든지 하여 자원관리를 잘하고 있다. 특히 시라하마에서는 고무옷을 입으면 물질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원관리를 위해 지금도 고무 잠수복을 금하고 있다. 일본 아마들은 1일 작업시간이 제주 해녀보다 짧으며, 중간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고 있다.

1)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 『제주도 부락지(1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7쪽.

2) 김영돈 외,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172쪽.

해녀문화의 전승보존 및 박물관 발전 방안을 위한 노력

좌 혜 경 (해녀박물관 연구팀장)

○ 해녀문화의 기초조사

- 가. 해녀문화탐방 -100개 어촌계 중 40여 곳 탐방
- 나. 해녀에 관한 고문헌 및 신문기사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 다. 해녀의 공동체 문화인 '불턱', 해녀의 신앙의 성소 '해신당', 대표적인 무속의례인 김녕리 '잠수굿', 어촌계문서 작업도구 등 자료조사. 지방문화재 지정

○ 해녀생태마을 지정

해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바다 어장의 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해녀생태마을을 지정하여 해녀생업 및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가. 해녀생태 마을 지정 타당성 용역 및 토론회
- 나. 해녀생태 마을을 위한 기반조성
- 다. 해녀생태 마을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

○일본아마와의 교류를 위한 추진 계획

- 가. 일본아마 사진 특별전
- 나. 제주해녀마을 (구좌읍 하도리)와 일본 해녀의 고향 후쿠오카 현 가네자키와 자매결연 및 한일공동 조사.
- 다. 해녀박물관과 일본 토바시 바다박물관(海博物館)과 자매결연 한·일 해녀 유물 교류전

○ 박물관 시설 확충 및 해녀 민속촌 건립

- 가. 초대형 아쿠아륨(해녀 작업 관람 수족관)
- 나. 특별 전시실 및 교육관 시설
- 다. 해녀 민속촌 건설 -해녀 물질작업 체험

○ 이어도관 건립

- 가. 제주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어도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전승하고 이어주는 교육장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 이어도 과학기지 홍보를 위한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
- 나. 제주민의 정신적인 고향, 이상향인 이어도 전시관 건립, 자신들의 삶의 한풀이로 만든 해녀 노래 속의 이어도 자료, 제주의 무속 신화, 전설 속의 자료, 전통 민속에 나타난 용궁에 대한 자료를 전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홍보관, 이어도 과학기지 전반 내용, 이어도 과학기지 관측자료 등 전시

○ 해녀의 날 지정

- 가. 해녀들의 전통예술 공연
- 나. 해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FTA 협상과 제주 수산업 발전방향

한 재 순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장)

토론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일 FTA” 및 “한·중 FTA체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아, 제주도 수산업계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한·일” 및 “한·중 FTA”에 대비하여 현재 법안이 제정추진 중이거나, 개정검토 되고 있는 다음의 2개 사안에 대하여 제주도내 전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코자 합니다.

1. 수산물 관세율할당제도(TRQ) 운영 관련

“수산물 관세율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운영에 있어 “한·일 FTA”에 대비하여서는 일본산 갈치, “한·중 FTA”에 대비하여서는 중국산 갈치 및 중국산 참조기를 TRQ 대상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TRQ운영기관으로 제주도내 해당 수협 등이 참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체결 관련 고등어 관리

○ 현재 고등어에 대해서는 TRQ(관세율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고등어 생산자단체인 “대형선망수협”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56호('06.9.1))

- 정부에서는 TRQ운영 수익금에 대하여는 공익적 목적(해당품목 소비 촉진 행사 등)에 사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중.

○ “한·EFTA FTA” 협정국가(4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실적(최근 3년간)

(톤, 천불)

· 품목번호	기본 관세	2004		2005		2006		2007.2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고등어(냉동) 0303-74-0000	10%	8,898	13,180	3,145	7,285	4,480	9,651	1,484	2,546

※ 07년 TRQ물량 : 연간 500톤(무관세), 노르웨이 국가 외 EFTA국가 수입실적 없음.

나. “한·일 FTA” 체결 관련 제주도 갈치 관리

○ 민감품목은 가능한 장기간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TRQ제도를 도입하여 제주도내 갈치생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 수립 필요.

○ TRQ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피해어민(갈치생산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갈치 품목에 대한 TRQ운영기관은 고등어의 예와 같이 주 생산단체인 제주도관내 해당 수협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일본산 갈치 등 수입실적(최근 3년간)

(톤,천불)

품목번호	기본 관세	2004		2005		2006		2007.2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갈치(신선) 0302-69-3000	20%	4,518	17,641	5,223	21,723	6,427	27,075	1,344	6,053
갈치(냉동) 0303-79-6000	10%	246	681	503	949	488	1,388	317	1,145
옥돔(냉장) 0302-69-4000(돔)	20%	115	545	128	709	48	374	4	31

제주도내 수협별 갈치 위판실적

(단위:톤,백만원)

연도별 조합명	2004년		2005년		2006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6,424	132,832	21,579	163,489	18,551	132,959
서귀포	3,633	33,980	5,463	44,153	4,880	39,527
모슬포	1,407	10,537	1,752	13,288	1,566	10,247
제주시	2,034	13,751	2,482	18,653	2,063	13,797
한림	2,601	16,781	2,507	15,585	3,183	19,565
성산포	6,748	57,783	9,375	71,810	6,860	49,823

※ '06년기준 총 위판고종 갈치 위판고 비중 : 성산포 (84.4%), 서귀포 (75.6%)

다. “한·중 FTA”체결 관련 제주산 참조기, 갈치 관리

○ 민감품목은 가능한 장기간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TRQ제도를 도입하여 참조기 및 갈치 생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보완 대책 수립 필요.

○ TRQ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피해어민(참조기, 갈치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참조기·갈치 품목에 대한 TRQ운영기관은 고등어의 예와 같이 제주도관내 주 생산 수협(참조기는 목포, 여수, 영광 등 타지역 수협 포함)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중국산 수산물 수입실적(최근 3년간)

(톤, 천불)

품목번호	기본 관세	2004		2005		2006		2007.2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옥돔(냉동) 0303-79-4010	10%	378	963	556	1,776	168	655	130	322
조기(냉동) 0303-79-6000	10%	53,584	129,600	59,095	142,145	52,375	147,616	13,547	41,727
갈치(냉동) 0303-79-6000	10%	21,950	52,765	20,667	52,719	20,310	48,812	4,352	10,552

조합별 참조기 위판실적

(단위:톤, 백만원)

연도별 조합명	2004년		2005년		2006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5,166	92,920	15,005	73,960	22,145	84,059
서귀포	171	1,435	55	405	84	358
모슬포	266	2,313	108	1,038	116	483
제주시	8	28	-	2	144	758
추자도	3,600	16,700	2,900	13,500	2,900	12,900
한림	1,923	16,479	3,856	19,233	5,344	22,386
목포	6,930	42,431	5,186	27,072	7,553	29,700
여수	1,235	7,303	2,093	8,877	4,616	11,833
영광	1,033	6,231	807	3,833	1,388	5,641

※ '06년기준 총 위판고중 참조기 위판고 비중 : 추자도 (99.2%), 한림(33.7%), 목포(38.1%)

2. ‘어패류 중 중금속(납) 허용기준 개정’ 검토 관련 의견

최근 동아일보(2007년 1월7일자)에 보도된 어패류 중금속허용치 강화추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어업인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됨.

가. 동아일보 보도내용과 중금속 허용기준치 현황

- 동아일보 보도요지 (2007.1.7자)
 - 수산물의 중금속(납)허용치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06년 7월 권고기준으로 정한 0.3PPM(mg/Kg)으로 기존의 2.0PPM에서 7배 강화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검토
 - 허용기준치 넘으면 유통금지 → 수산업계 비상
- 중금속(납) 허용기준치 설정 현황
 - 국내기준 : 2.0PPM (해산 어패류, 담수어)
(식품위생법근거 식품공전 제3.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식품일반의규격)
 - CODEX 권고기준 : 0.3PPM (어류 최대허용 기준)

나. 중금속 허용기준치 건의 안

중금속 허용기준	현 행	식약청 개정(안)	건의 안
어류 중 납	2.0PPM(mg/Kg)	0.5PPM(mg/Kg)	2.0PPM(mg/Kg)

- 중금속은 산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요소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기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근거하여 적용 어종과 지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연근해 어종의 납 함량 모니터링결과를 근거할 때 식약청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근해 어획물은 대부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어민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아도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할 수 없어 폐기해야하는 과도한 기준치임.

○ 부산 및 제주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자료

-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산물안전성조사 자료(2004, 2005년)
넙치 1.22mg/Kg, 오징어 0.78mg/Kg, 갈치 0.71mg/Kg, 가자미 0.8mg/Kg,
삼치 0.97mg/Kg, 바지락 0.72mg/Kg, 굴 0.7mg/Kg, 미더덕 0.73mg/Kg
- ◆ 제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산물안전성조사 자료(2006년)
갈치 0.3mg/Kg, 옥돔 0.4mg/Kg, 고등어 0.4mg/Kg

※ 출처 : 부산광역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안전성조사

- 제38차 CODEX채택기준은 권고사항(권고기준은 구속력이 없어 각국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으로 당장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생산자 및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준이 설정되어야함.
- 수산물 중금속 문제는 어민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로 육지의 오폐수 유입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계속 방치함으로 연안환경의 오염도를 가중시킨 관리부실이 주요원인으로 연안수산물의 어획을 생업으로 하는 40만 어민은 생업에 종사한 죄밖에 없음
- 어획자원 고갈 및 어업비용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으로서는 각 국가의 FTA체결로 수산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된 권고기준을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적용한다면 결국 수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임
- 토론자는 폐기물 해양투기 및 육지 오폐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고,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생산해역 안전평가사업' 완료되어 명확한 해양환경이 측정된 후 수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해양오염 증가가 중단됨이 입증되고, 명확한 해양환경 측정이 선행되기 이전까지는 현행의 기준(2.0mg/Kg)을 적용해야 하며, 수협중앙회에서는 동 사항을 식약청에 건의토록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의견 제출중에 있음.

M E M O

M E M O

M E M O